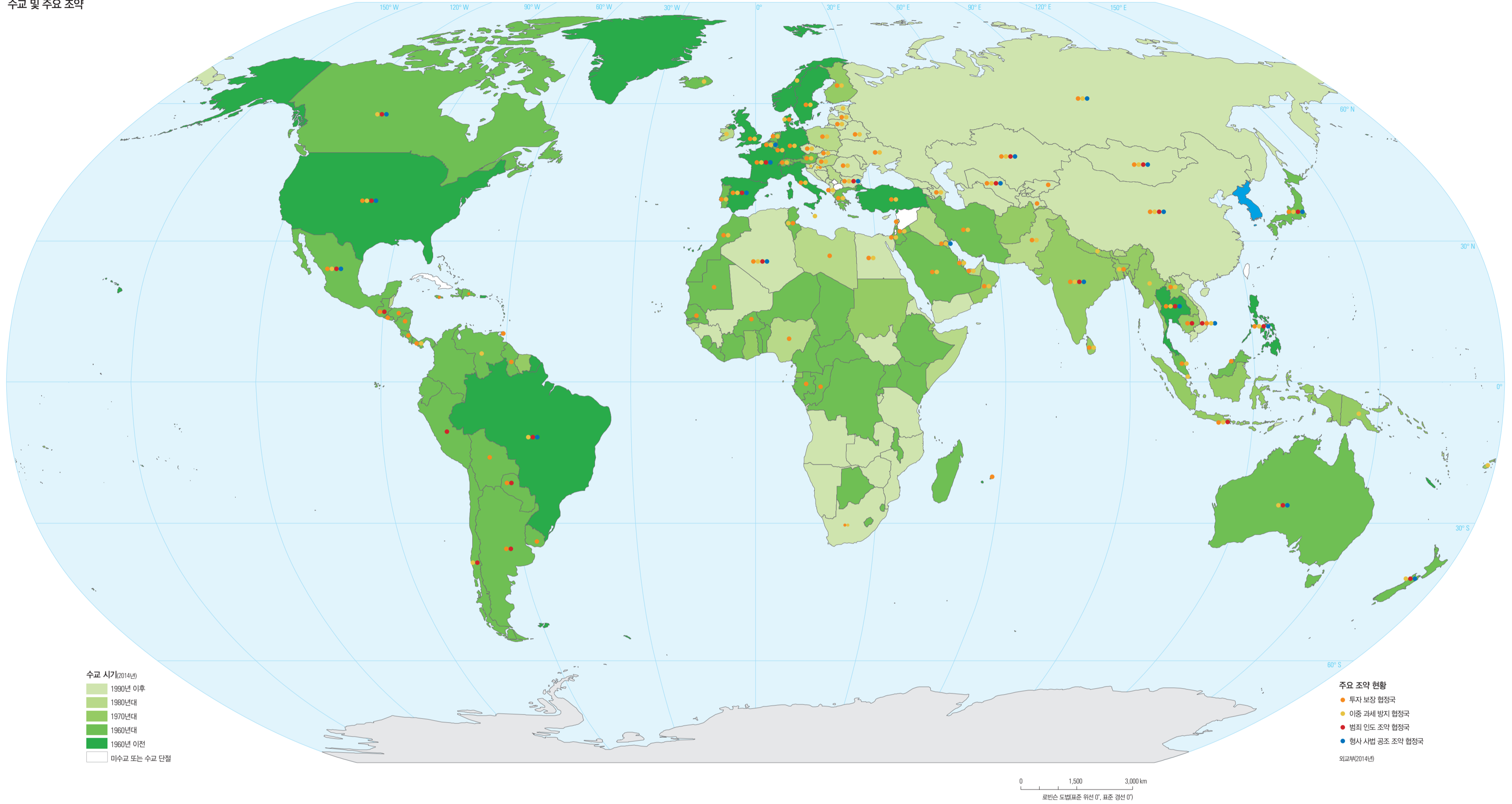


# 외교

## 수교 및 조약

### 수교 및 주요 조약



우리는 흔히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한다. 이는 우리의 삶이 지구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관계, 즉 외교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우리나라는 현재 190개 국가 또는 지역과 수교를 맺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투자 보장 협정,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조약을 통해 실질적 협력을 하고 있다.

국제 협력과 제의 국민 및 재외 동포 지원을 위해 세계적으로 160여 개에 달하는 대사관, 총영사관 혹은 대표부를 두고 있다. 2013년 현재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 외국 국민 등 재외 동포는 그 수가 약 70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1990년대 초 한 해에 3만여 명에 달했던 해외 이주자 수는 경제 성장, 민주화와 더불어 감소하였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 교류를 살펴보면 2012년 현재

한국인 출국자 수는 1,200만 명 이상이며, 외국인 입국자는 1,000만 명을 넘는다. 이러한 활발한 민간 차원의 교류는 다른 국가와의 비자 면제 협정을 통해 촉진되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인한 성장률의 둔화를 타개하고, 다자적 무역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에 힘쓰고 있다. 또한 8개에 달하는 주요 지역 협력 체에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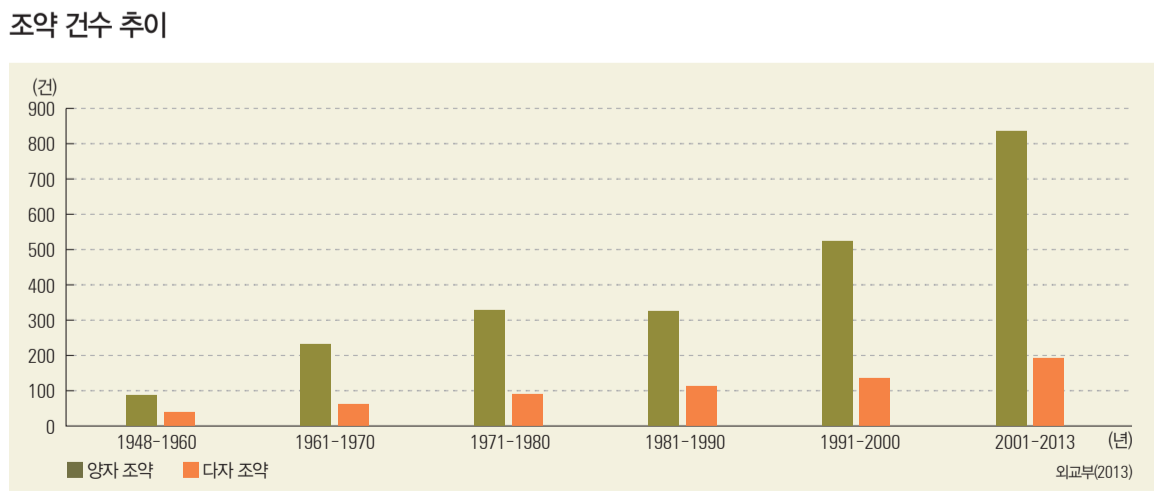
국제 평화, 인권, 개발,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 혹은 정부 간 기구에 가입해 왔으며, 나아가 이들 기구를 유지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책무를 맡고 있다. 우선 유엔 정규 예산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분담금의 규모 또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크게 증가하여 적지 않은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 하는 분쟁과 이에 따른 인권 침해를 평화적으로 수습

하고자 유엔 국제 평화 유지 활동(PKO)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전세계에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호·친선을 증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학 기반 확대, 한국 전문가 육성, 인사 교류, 문화 교류, 국제 협력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활발한 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수교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교류를 맺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2014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188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으며, 마케도니아, 시리아, 쿠바와는 수교 관계가 없다. 유엔 비회원국 중에서는 교황청, 룩 제도와 수교를 맺고 있다.

지도는 현존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은 시기별로 표현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60년까지만 해도 수교국은 16개의 자유 우방 국가에 한정되었다. 1960년대에 65개 국가와 수교를 맺으면서 수교국 수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비동맹 국가였다. 이들 비동맹 국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내 소위 '제3세계'의 개발 도상국으로 1960~1970년대를 통해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1961년

비동맹 국가 5개국과 수교를 시작으로 1969년까지 37개국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점차 이들 국가와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30개 국가와 그리고 1980년대에 22개 국가와 수교를 하였다. 동서 냉전 시기에 정부는 긴장된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합법적인 국제 관계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명 '홀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을 고수하였다. 즉 북한을 승인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고, 국제회의 등에서 북한의 참가를 거부하는 정책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정부가 남북 대화를 시작하면서 1973년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과 함께 공식 철회되었다.

1980년대 중반 들어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면서 냉전은 점차 완화되고 화해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에는 1988년 물타 미·소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양국 정상은 냉전을 종식하고 상호 적대 관계를 지양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에 동유럽 공산권

국가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이듬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다. 1991년 12월에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면서 냉전 질서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추어 정부는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동구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1990년에는 소련과의 역사적인 국교 수립이 이루어졌다.

조약이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 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성의 명칭에 관계 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항 a호 참조). 하지만 위 정의는 편의상 국가 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간의 국제적 합의도 조약이라 한다. 조약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조약(treaty), 헌장(charter, constitution)·규정(statute)·규약(covenant), 협정(agreement),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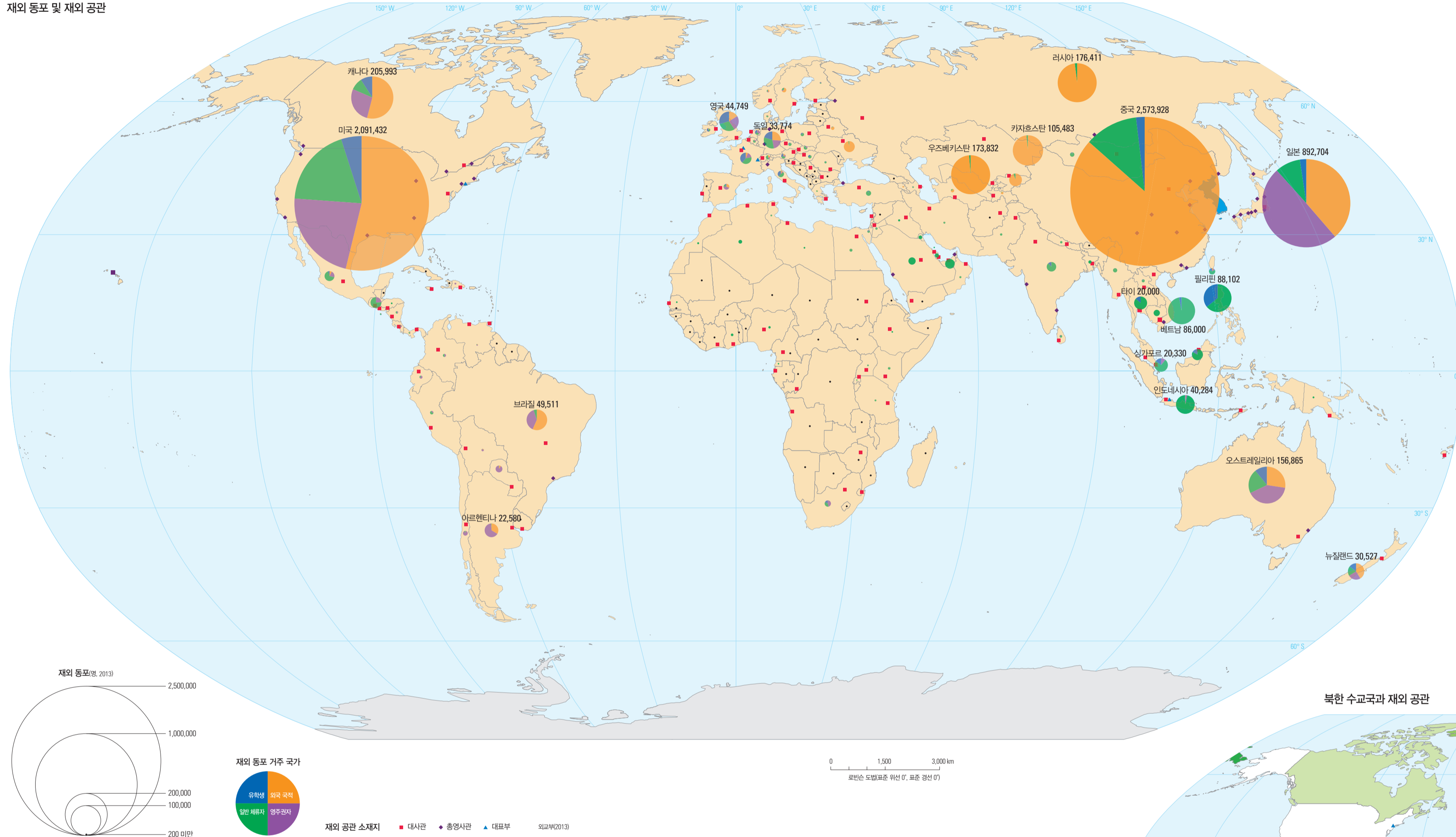
(convention), 의정서(protocol), 각서 교환(exchange of notes),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기관 간 약정(agency-to-agency arrangement) 등이 있다.

지도는 2012년 현재 투자 보장 협정, 이중 과세 방지 협약, 범죄인 인도 조약, 형사 사법 공조 조약 등 주요 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표시한 것이다. 각 조약을 체결한 국가 수를 보면 투자 보장 협정 87개국, 이중 과세 방지 협약 78개국, 범죄인 인도 조약 26개국, 형사 사법 공조 조약 22개국이다. 그리고 이들 조약을 모두 체결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다.

그레프는 연도별 조약 체결 건수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은 국가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양자 조약 체결 건수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양자 조약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다자 조약을 체결한 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포 및 공관

재외 동포 및 재외 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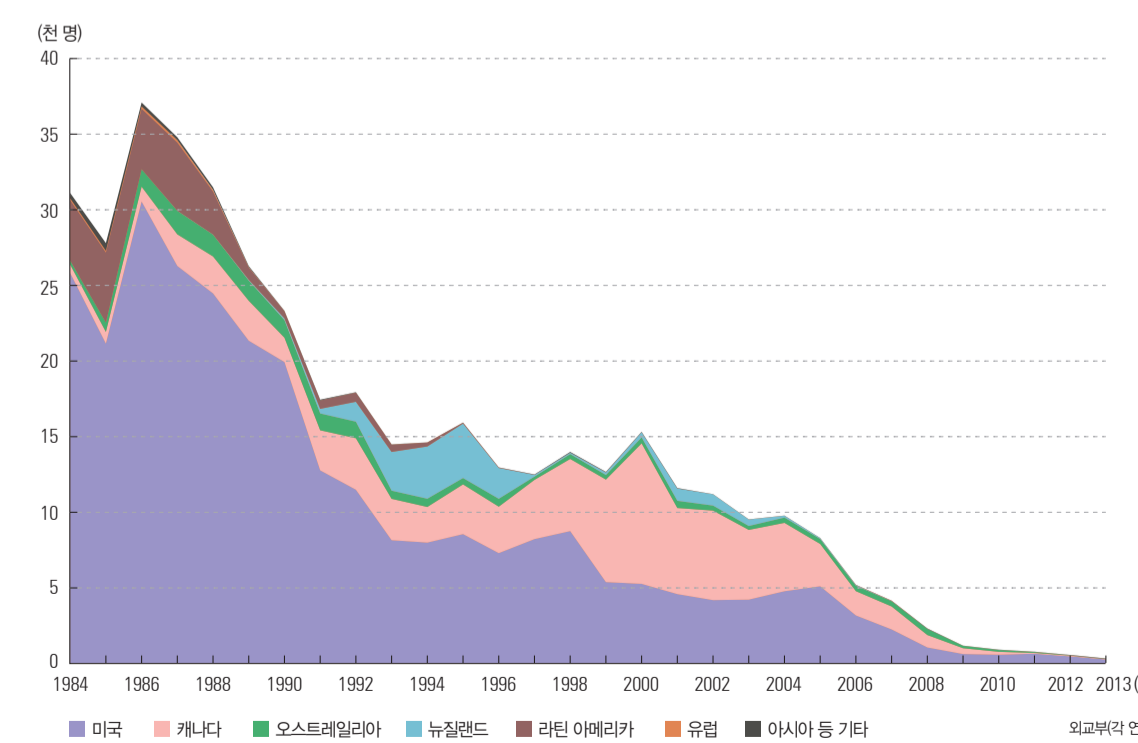
지도는 재외 공관의 지리적 분포를 보여 준다. 재외 공관은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의 수도에 설치하는 대사관, 국제기구에 설치하는 대표부, 재외 국민 및 재외 동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영사 보호 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총영사관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 중 188개국 및 유엔 비회원국 교황청, 쿡 제도와 수교하고 있다. 이들 수교국 190개 중 113개국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43개의 총영사관과 5개의 대표부를 두고 있다. 재외 공관은 상대적으로 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이들 지역 국가와 특히 미국과 일본 및 중국과 밀접한 경제, 사회, 정치적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가 많기 때문이다.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외환 위기 전까지 재외 공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외환 위기 직후 정부의 구조 조정 여파로 22개 재외 공관이 폐쇄되어 그 수가 크게 줄었으나, 외교 업무 수요의 증가에 따라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하였다. 이렇듯 재외 공관의 숫자는 외교 수요 및 국가 경제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 점은 북한의 재외 공관 분포와의 비교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북한은 46개의 상주 대사관, 3개 총영사관, 4개의 대표부를 유지하고 있어 그 수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큰 격차를 보인다.

또한 지도는 재외 동포의 유형별·국가별 분포를 보여 준다. 재외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과 거주국의 시민권을 가진 외국 국민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재외 국민은 다시 영주권자, 유학생, 일반 체류자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한 자료는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재외 공관에서 작성한 공관별 재외 동포 현황을 취합하고 정리한 것으로, 주재국의 인구 관련 통계 자료, 한인회 등 동포 단체 조사 자료, 재외 국민 등록부 등 공관 민원 처리 기록 직접 조사 등을 근거로 산출한 추산치이다. 이 자료는 재외 동포 지원, 보호에 관한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 시 또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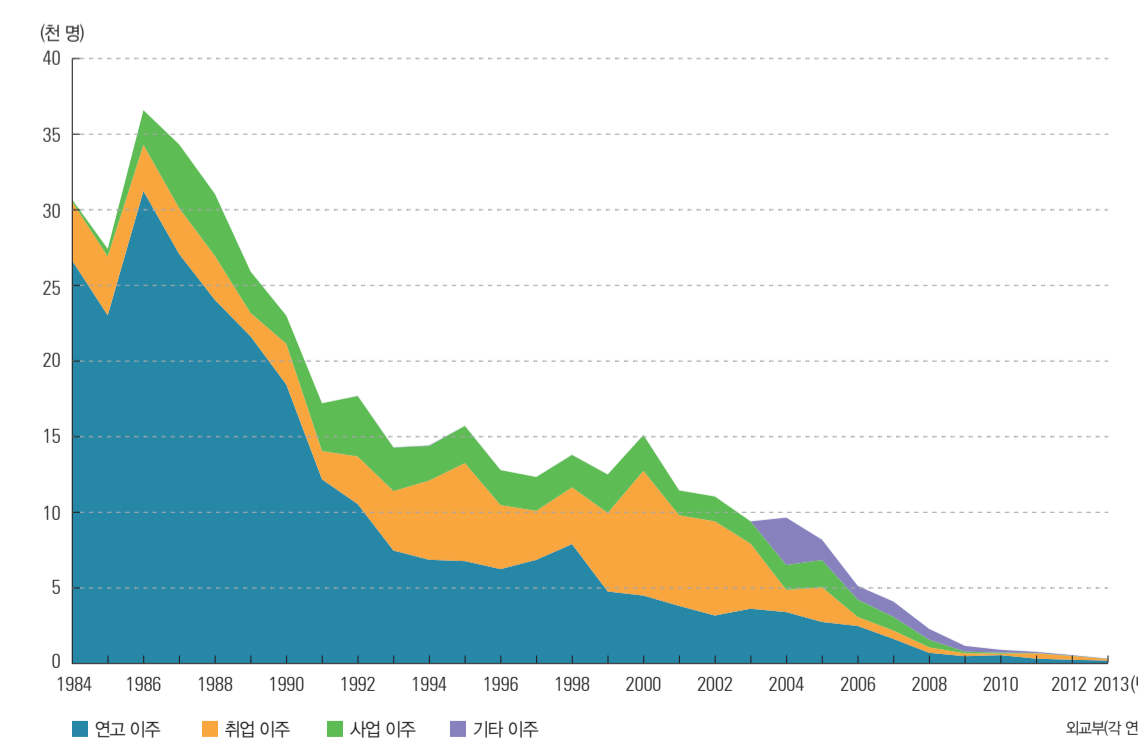
재외 동포 수는 1991년에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수교로 조선족이 통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대체로 완만히 상승하여 2013년 현재 재외 동포 수는 약 7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재외 국민은 112만여 명의 영주권자, 119만여 명의 일반 체류자, 30만여 명의 유학생으로 구성되며, 외국 국민은 약 440만여 명이다.

그래프는 수면국별 그리고 형태별 해외 이주 신고자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 준다. 가장 큰 특징은 해외 이주 신고자가 1984년 31,111명에서 2013년 302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해외 이주 신고자의 대다수가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상이 대내외로 인식되면서 해외 이주가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의 비중은 줄어들고는 반면 미국 이외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다른 영연권 국가의 비중이 늘어났다. 해외 이주 신고자 형태별 보면 전통적으로 연고 이주(초청)가 가장 많고, 취업 이주, 사업 이주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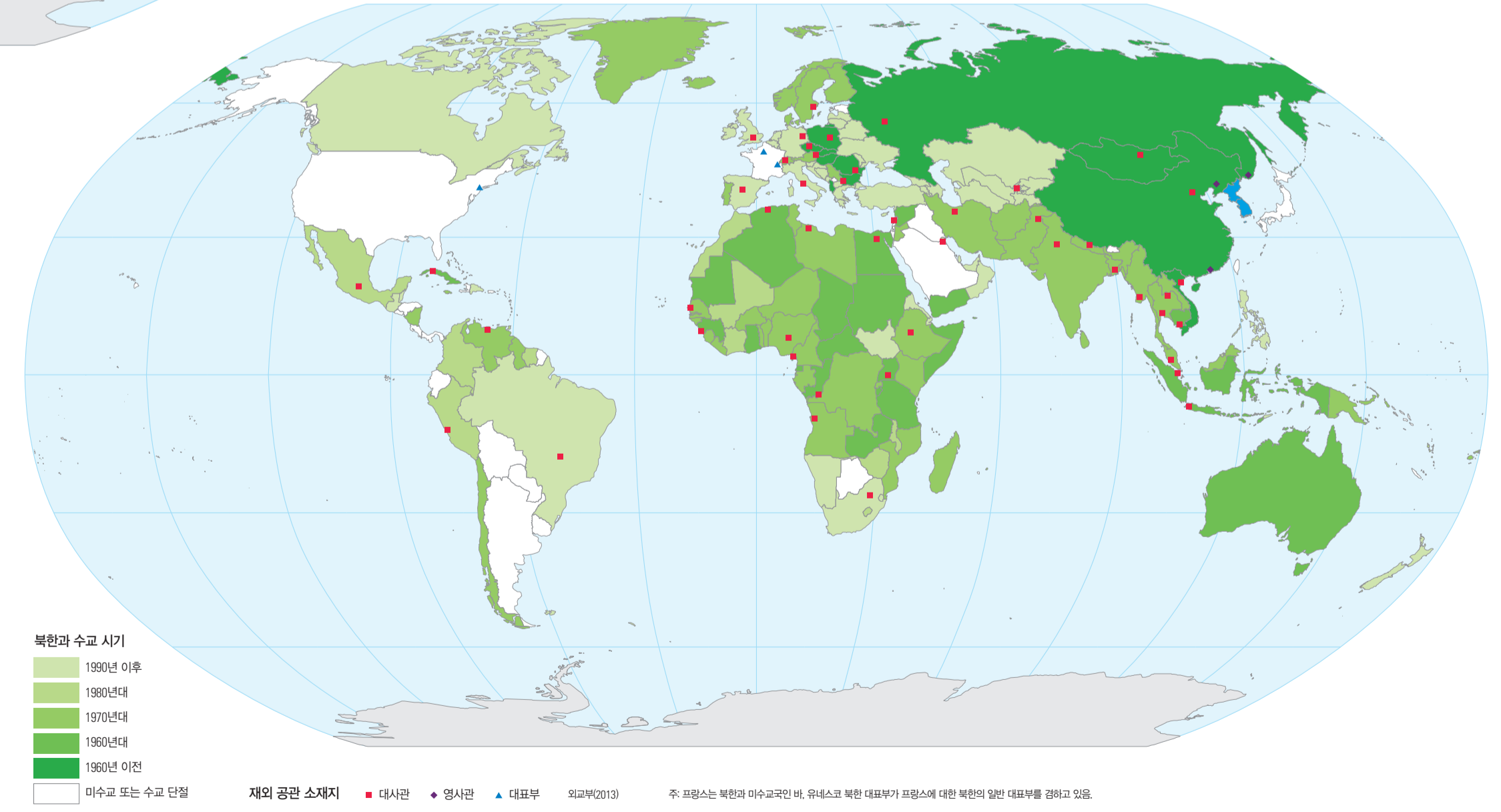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해외 이주 신고자 추이



형태별 해외 이주 신고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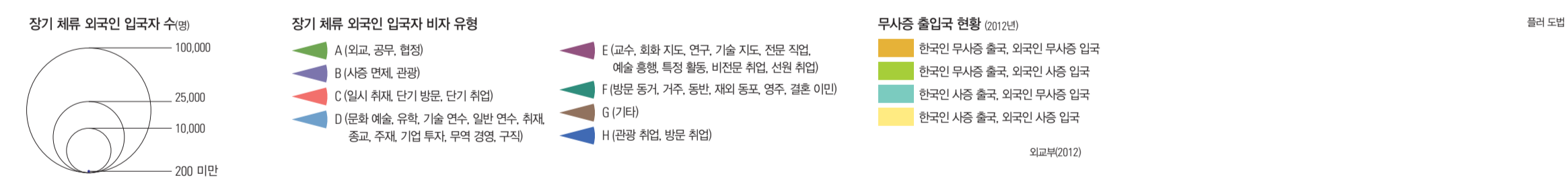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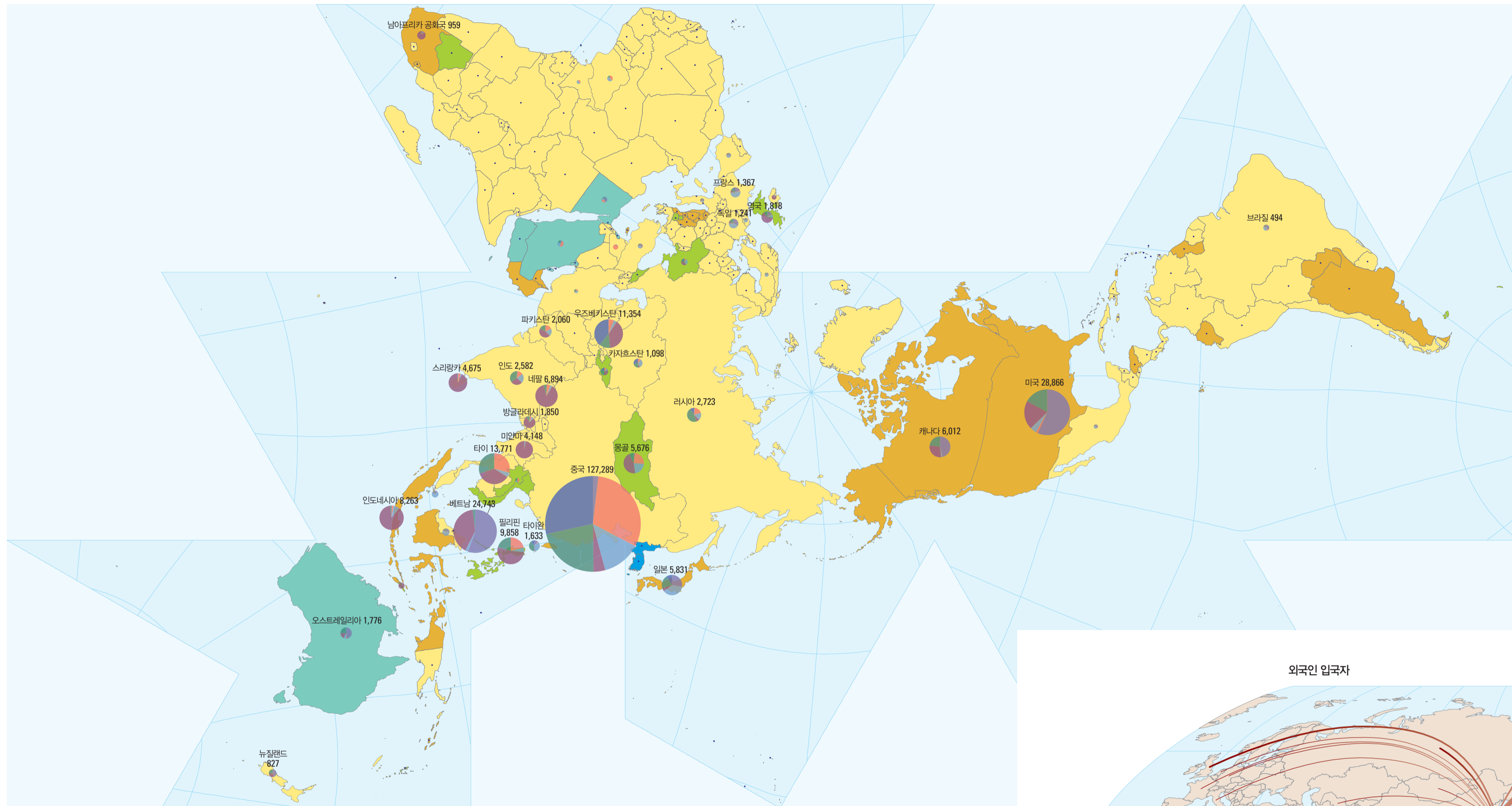


북한 수교국과 재외 공관



출국과 입국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신 국가 및 무사증 출입 가능 국가



2012년도 한국인의 출국과 외국인의 입국 현황을 통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 교류를 민간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부는 인적 교류가 용이하도록 세계 여러 국가 혹은 지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해 왔다. 몇몇 국가 혹은 지역은 외교·관광 여권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체류 가능 기간 또한 상이하지만, 한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곳은 53개 국가 및 지역에 달한다(아시아 11개, 아메리카 8개, 유럽 16개, 오세아니아 11개, 아프리카·서남아시아 7개).

한편 한국은 외교·관광 여권을 요구하거나 체류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국의 차원에서 50개 국가 혹은 지역 출신 국민에게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아시아 6개, 아메리카 7개, 유럽 11개, 오세아니아 13개, 아프리카·서남아시아 13개). 또한 환승 관광 외국인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등 5개국으로 가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해당 국가의 사증과 연결 항공편이 확인되면 30일 간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위 5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본국으로 귀국 시에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특히 제주도 지역은 '제주도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 국민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제주 지역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는 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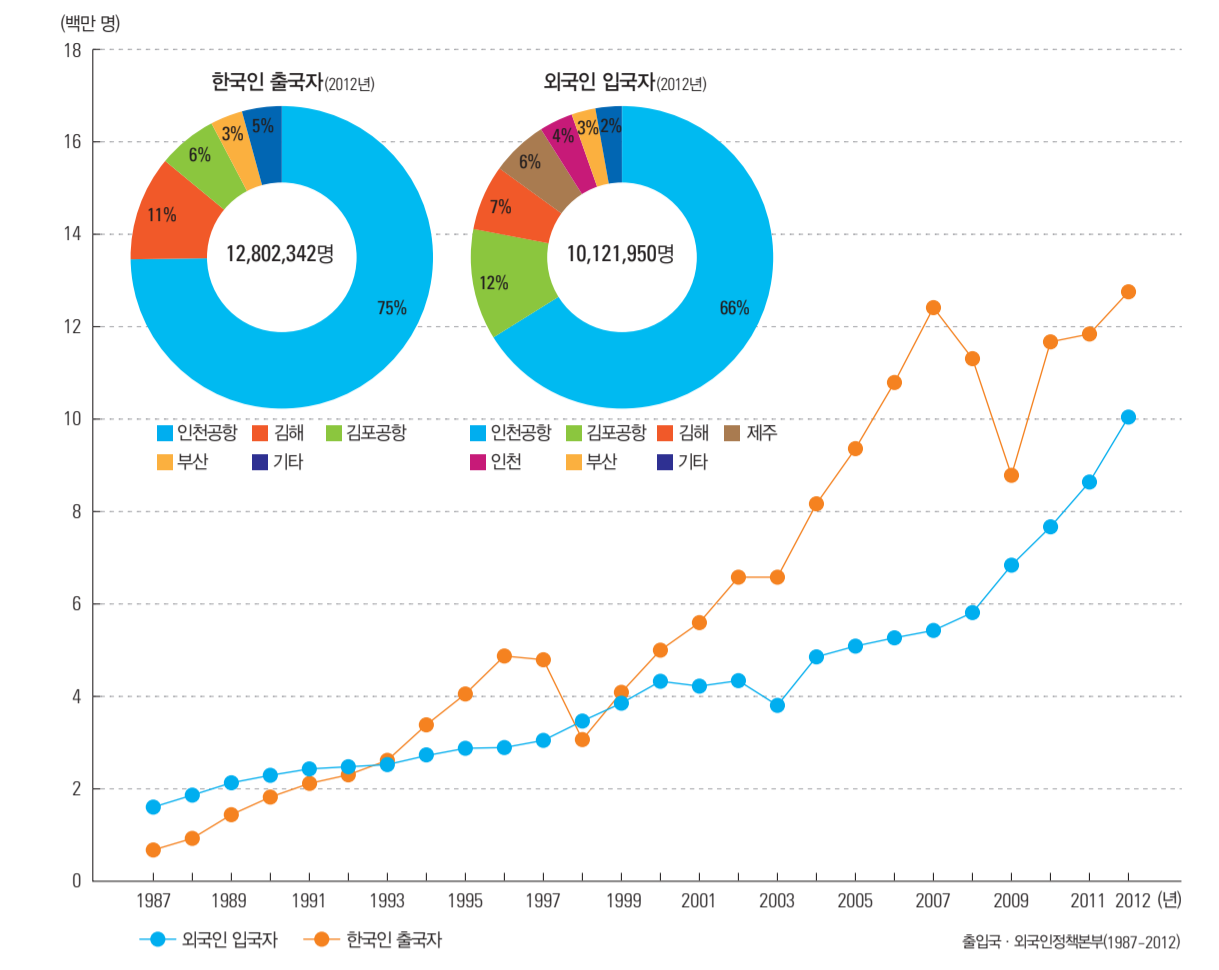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11개국이다.

위 지도는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목적으로 들어 왔는지를 보여 준다. 체류 목적은 소지하고 있는 비자로 파악할 수 있는데, 8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형(외교, 공무, 협정), B형(사증 면제, 관광), C형(일시 취재, 단기 방문, 단기 취업), D형(문화 예술, 유학, 기술 연수, 일반 연수, 취재, 종교, 주재, 기업 투자, 무역 경영, 구직), E형(교수, 회화 지도, 연구, 기술 지도, 전문 직업, 예술 흥행, 특정 활동, 비전문 취업, 선원 취업), F형(방문 동거, 거주, 동반, 재외 동포, 영주, 결혼 이민), G형(기타), H형(관광 취업, 방문 취업)이 그것이다.

오른쪽 지도에서 선들은 2012년도에 한국에 입국한 외

국인의 수를 그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국적별로 표시한 것이다. 입국자 수는 일본, 중국, 미국, 타이완,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영국, 러시아 순으로 많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국적 외국인 입국자는 각각 300만 명이 넘는다. 다음으로 많은 미국 국적 입국자는 약 73만 명에 불과하여 큰 격차를 보인다. 이는 지리적 인접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타이완 약 57만 명, 타이 약 33만 명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10만 명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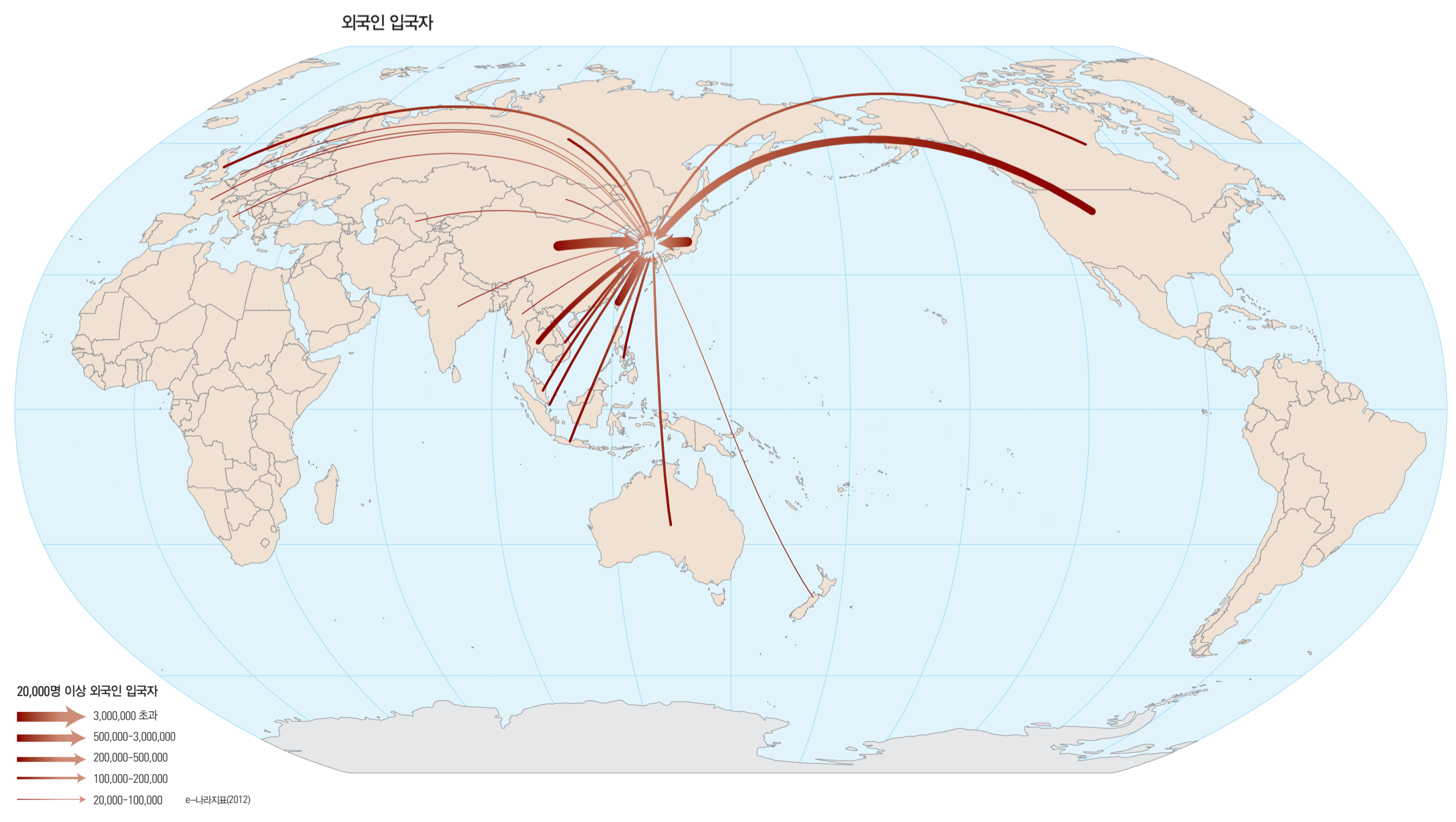
한국인 출국자 및 외국인 입국자 추이



위 그래프는 외국인 입국자와 한국인 출국자 추이를 보여 준다. 외국인 입국자와 한국인 출국자 수는 1960년까지만 해도 각각 만 명을 넘지 못했다. 외국인 입국자는 1970년에 10만 명을 그리고 1983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05년에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2년 현재 1,000만 명 이상이다. 반면 한국인 출국자는 1973년에 10만 명을, 1988년에 100만 명을, 2000년에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2년 현재 약 1,280만 명이 다. 전통적으로 외국인 입국자 수가 한국인 출국자보다 많았다. 1988년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입국자는 한국인 출국자보다 2배 가량 많았다. 하지만 1989년에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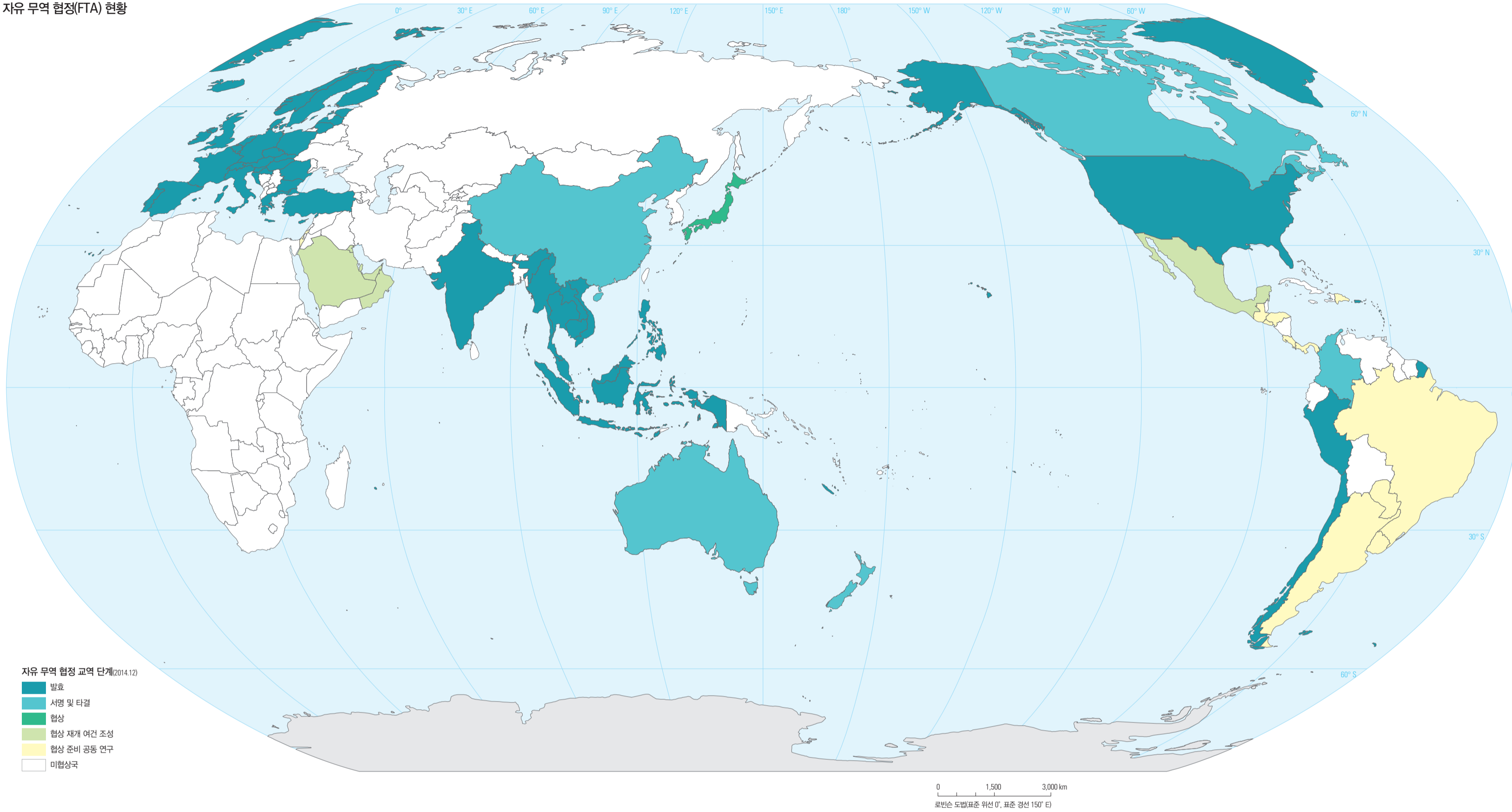
민 해외 여행이 전연 자유화되면서 한국인 출국자 수는 외국인 입국자를 앞질렀으며 경기 불황으로 추축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한국인 출국과 외국인 입국을 출입국지별로 살펴보면 2012년 현재 한국인 출국자 상당수가 인천공항(75%)을 통해 해외로 나가며 다음으로 김해(11%), 김포공항(6%), 부산(3%)을 이용한다. 외국인 입국자 또한 다수가 인천공항(66%), 김포공항(12%), 인천(4%) 등 수도권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며 김해(7%), 제주(6%), 부산(3%)을 이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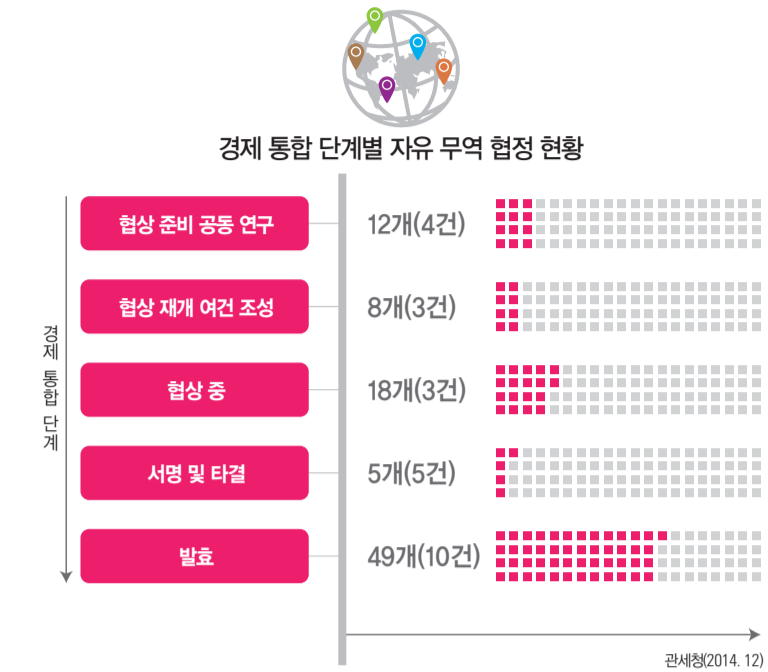


자유 무역 협정(FTA) 및 지역 협력체

자유 무역 협정(FTA) 현황



자유 무역 협정 교역 단계(2014.12)  
 발효  
 서명 및 타결  
 협상 중  
 협상 재개 여건 조성  
 협상 준비 공동 연구  
 미협상국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세계 무역 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무역 체제를 바탕으로 전개되던 한국의 대외 통상 정책은 큰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다자주의와 더불어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 체결 이후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1998년 11월 첫 자유 무역 협정 대상 국가로 칠레를 선정하였고, 5년 간의 협거은 협상 끝에 2003년 2월에 칠레와 한국 최초의 자유 무역 협정을 맺었다. 이후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싱가포르와 유럽의 거점인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 각각 2005년 8월과 11월에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발효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2014년 5월 현재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발효된 국가는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 인도, 유럽 연합(EU) 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다.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콜롬비아,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이다. 또한 자유 무역 협정을 협상 중인 국가는 인도네시아, 한국·중국·일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소속 16개국 등이다. 자유 무역 협정 협상을 계개할 여건을 조성 중인 국가는 일본, 멕시코, 걸프 협력 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소속 6

개국이다. 끝으로 협상을 준비하며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는 남미 공동 시장(Mercosur) 소속 4개국, 이스라엘, 중미 6개국, 말레이시아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지역 블록화의 확산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등으로 성장률의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다자적 무역 체제를 보완할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하였다. 주요 경제 권역 내 거점 국가를 선정하여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걸프 협력 이사회 등 차세대 거대 경제권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얻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FEALAC), 아시아 협력 대화(ACD),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 동아시아 정상 회의(EAS), G20 정상 회의·재무장관 회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UN ESCAP) 등 다양한 지역 협력체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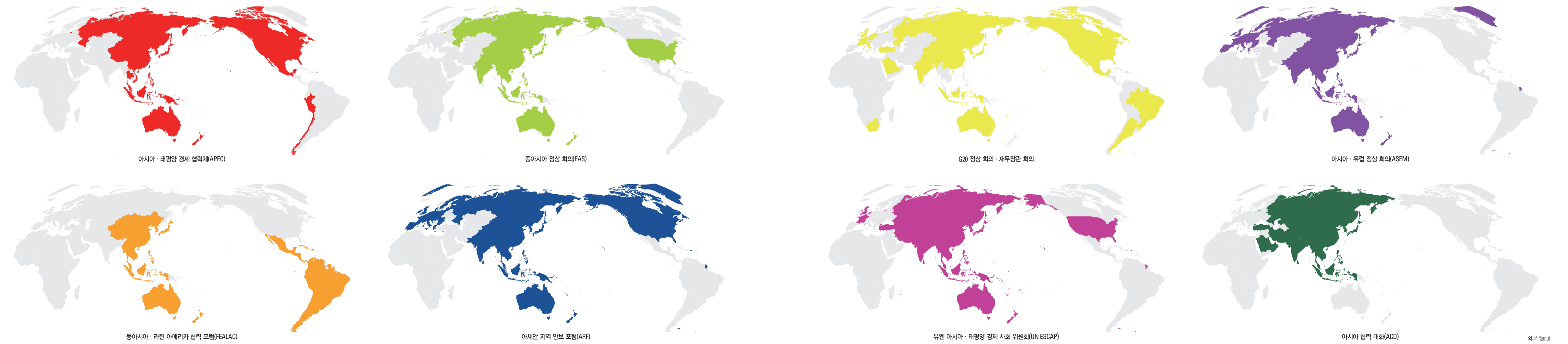
1989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에서 우리나라는 창설 멤버로 참여하여 협력체의 제도적 틀 마련과 새로운 회원국 충원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탈냉전 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에 맞추어 아·태 지역 내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에 따라 1994년 설립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아시아, 북미, 유럽 중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미약했던 아시아·유럽 간 관계 강화를 위해 1996년 공식화된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 간 경제 협력 확대 외에도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정치·안보 대화, 사회·문화 등 여타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등 양 지역 간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지역 간 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1999년에 설립된 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FEALAC)의 일원이기도 하다.

아세안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동아시아 정상 회의(EAS)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서를 포괄하는 아시아 전체 협력 달성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 협력 대화(ACD)의 일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 위기의 전 세계 확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 금융·통화 질서(이른바 'Bretton Woods II' 체제) 수립을 위해서 G7,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한 G20 정상 회의·재무장관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UN ESCAP)의 일원이기도 하다.

지역 협력체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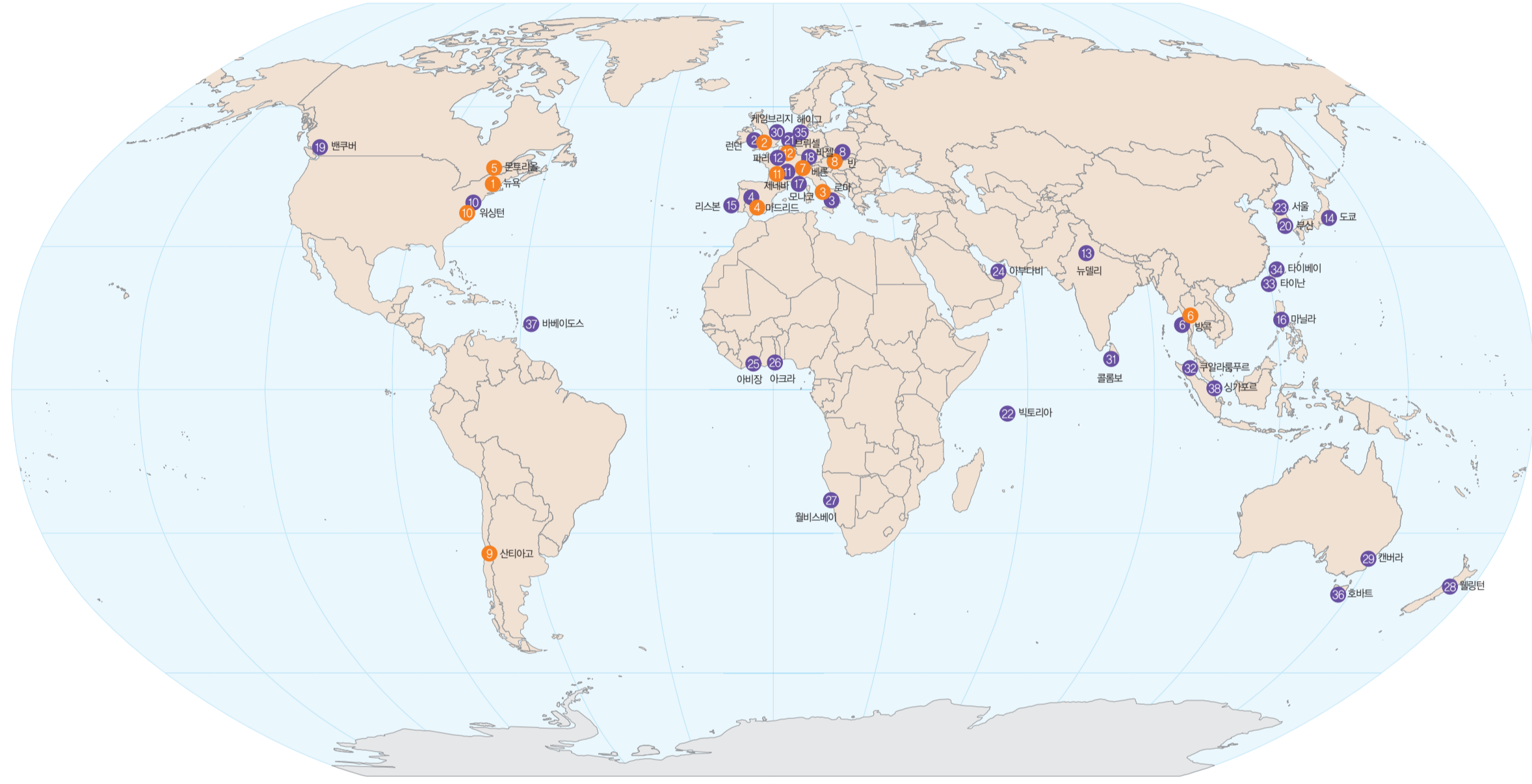


국제기구

유엔 및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 가입 현황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한국 가입 연도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한국 가입 연도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한국 가입 연도
1	뉴욕	국제 연합(UN)	1991	7	베른	만국 우편 연합(UPU)	1949	10	워싱턴	국제 금융 공사(IFC)	1964
2	런던	국제 해사 기구(IMO)	1962	8	빈	유엔 공업 개발 기구(UNIDO)	1967			11	제네바
3	로마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	1949	9	산티아고	국제 원자력 기구(AEA)	1957	12	파리	세계 무역 기구(WTO)	1995
		국제 농업 개발 기구(IFAD)	1978			유엔 중남미 카리브 경제 위원회(ECLAC)	2007			제네바 근축 회의(CD)	1996
4	마드리드	세계 관광 기구(UNWTO)	1975	10	워싱턴	국제 통화 기금(IMF)	1955	11	제네바	세계 보건 기구(WHO)	1949
5	몬트리올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1952			국제 부흥 개발 은행(IBRD)	1955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	1952
6	방콕	유엔 아태 경제 사회 위원회(ESCAP)	1954	10	워싱턴	국제 개발 협회(IDA)	1961	11	제네바	세계 기상 기구(WMO)	1956
						국제 개발 협회(IDA)	1961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1979

유엔 및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와 정부 간 기구 가입 현황



정부 간 기구 가입 현황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한국 가입 연도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한국 가입 연도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한국 가입 연도		
2	런던	유럽 부흥 개발 은행(EBRD)	1990	11	제네바	국제 교육기(IEE)	1962	17	모나코	국제 수로 기구(IHO)	1957		
		국제 이동 위성 기구(IMSO)	1985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	1963			27	월비스베이	남동 대서양 수산 기구(SEAFO)	2011
		국제 유류 오염 보상 기구(OPC Funds)	1998			상품 공동 기금(CFC)	1982			28	월링턴	남태평양 지역 수산 관리 기구(SPRFM)	2012
3	로마	FAO/WHO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CAC)	1970	18	바젤	금융 안전 위원회(FSB)	2009	29	캔버라	동남아·뉴질랜드·호주 중앙 은행 기구(SEANZA)	1966		
		국제 문화재 보존 복구 연구 센터(CCRORM)	1968			섬유 수출 개도국 기구(ITCB)	1984			29	캔버라	남방 참다람쥐 보존 위원회(CCSBT)	2001
4	마드리드	대서양 참치 보존 위원회(CCAT)	1970	12	파리	정부 간 해양학 위원회(IOC)	1961	19	밴쿠버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 위원회(NPAFC)	2003		
		국제 도량형국(BWM)	1981			국제 법적 거래 기구(OIML)	1978			30	캠브리지	국제 포경 위원회(IWC)	1978
6	방콕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 보호 위원회(APPPC)	1979	13	뉴델리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1996	21	브뤼셀	유엔 기념 공원(UNMCK)	1959		
		아시아·태평양 전기 통신 협의체(APT)	1950			아시아·아프리카 법률 자문 기구(AALCO)	1974			21	브뤼셀	세계 관세 기구(WCO)	1968
8	빈	포괄적 핵심형 금지 조약 기구(CBITO)	1996	13	뉴델리	아프리카·아시아 농촌 개발 기구(AARD)	1963	22	빅토리아	인도양 참치 위원회(OTC)	1996		
		지구 환경 금융(GEF)	1994			아프리카·아시아 농촌 개발 기구(AARD)	1963			23	서울	국제 백신 연구소(IVI)	1997
10	워싱턴	국제 연화 자원 위원회(CAC)	1954	14	도쿄	아시아 생산성 기구(APO)	1961	24	아부다비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GGGI)	2012		
		국제 전기 통신 위성 기구(INTELSAT)	1967			국제 남·이연 연구 그룹(ILZSG)	1987			24	아부다비	국제 재생 에너지 기구(IRENA)	2011
11	제네바	국제 무역 센터(ITC)	1964	15	리스본	아시아 개발 은행(ADB)	1966	35	헤이그	화학 무기 금지 기구(OPCW)	1997		
		국제 의회 연합(IU)	1964			아시아 개발 은행(ADB)	1966			36	호바트	남극 해양 생물 자원 보존 위원회(CCAMLR)	1985
				16	마닐라	아시아·태평양 우편 연합(APPU)	1961	37	바베이도스	중서 대서양 수산 위원회(MECAF)	1974		
						동부 지역 공공 행정 기구(EROPA)	1962			38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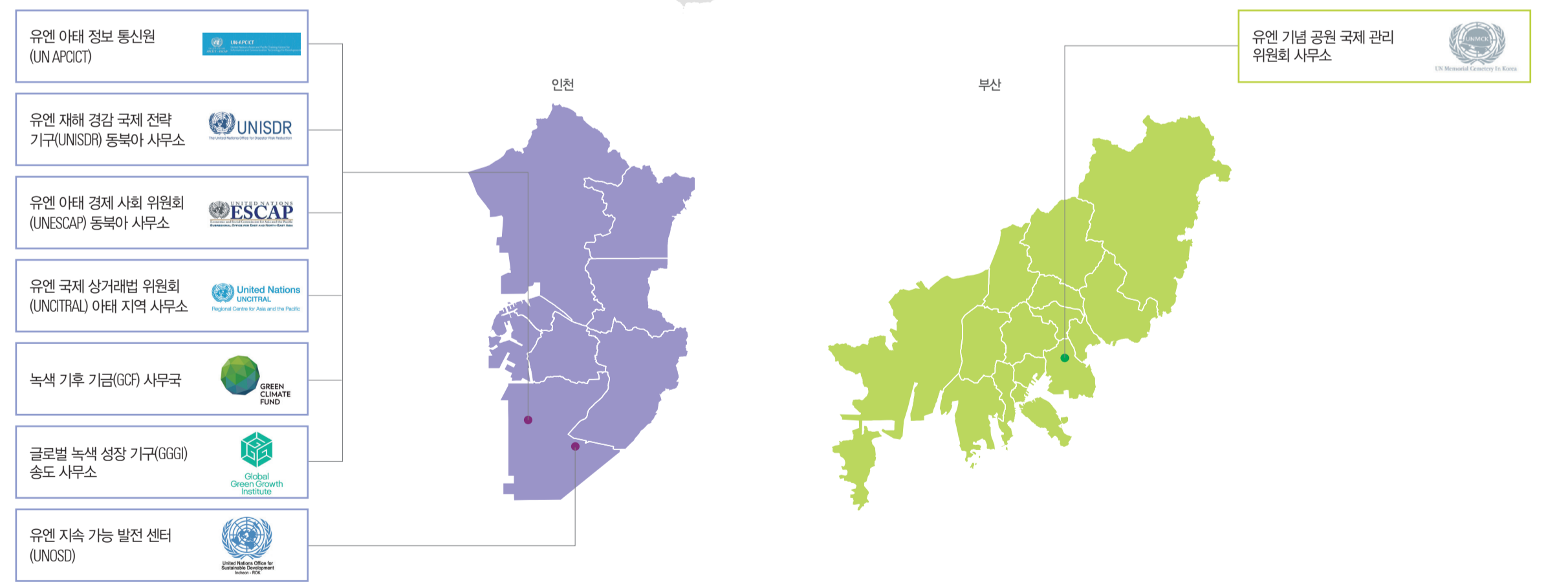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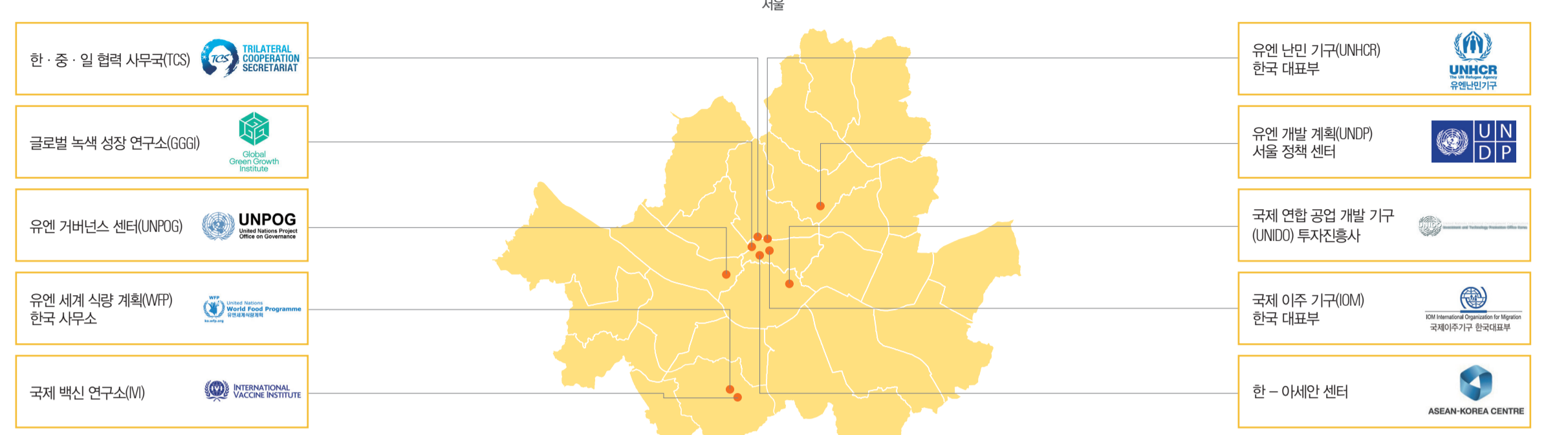
유엔(UN)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외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우리나라는 1949년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 만국 우편 연합(UPU), 세계 보건 기구(WHO)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여타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에 가입해 왔다. 지도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총 26개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1991년에는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평화, 인권, 개발,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들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이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등을 역임해 왔다. 또한 제56차 유엔 총회의장을 수임한 데 이어 2007년에는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2011년 연임)으로 취임하여 국제 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2013년 12월 기준 82개에 달하는 정부 간 기구에 가입하여 경제 협력, 자원 개발, 국제 개발 협력, 질병 관리, 환경 보호 등을 위한 다자 외교에도 힘쓰고 있다.

국제기구 유치 현황



사람, 물자, 정보 등의 국경 간 이동이 점차 늘어나면서 여러 국가들이 힘과 자원을 모을 필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협력의 장이 국제기구이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유치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제기구 관련 업무는 각종 국제 회의의 등 국제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고도의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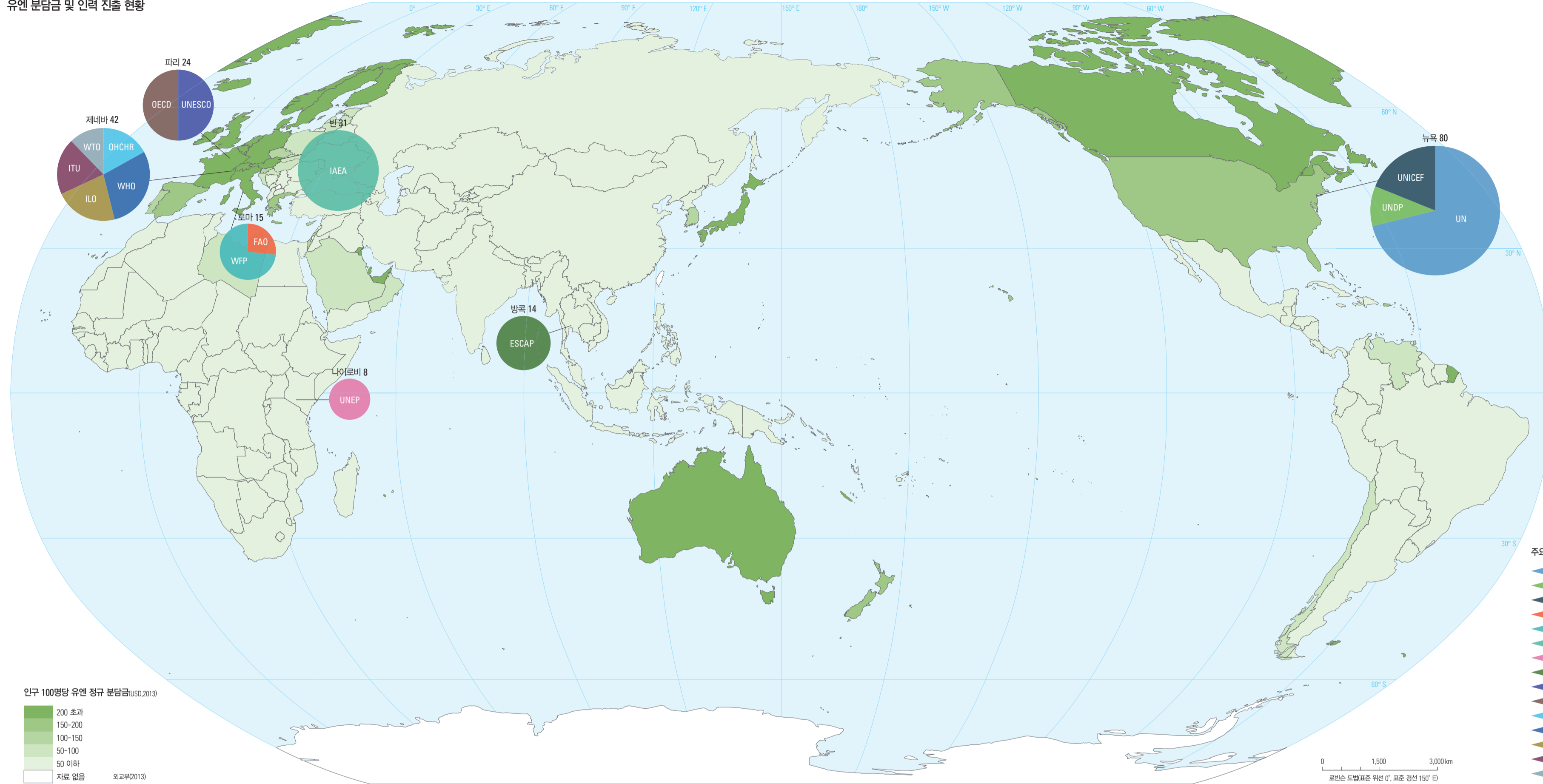
는 부수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시 4개, 인천시 1개, 부산시 1개 등 총 6개의 국제기구 본부 및 사무국을, 이외 약 20여개의 국제기구 관련 기관을 유치하였다. 서울이 유치한 국제기구는 국제 백신 연구소, 한-아세안 센터, 한·중·일 협력 사무국,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GGGI) 등이다. 반면 부산과 인천은 각각 재한 유

엔 기념 공원과 녹색 기후 기금 사무국을 유치하였다. 이 중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첫 번째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개발 도상국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2012년에 유엔 지속 가능 발전 정상 회의(Rio+20)를 계기로 국제기구로 전환되었다.

국제 백신 연구소(IVI)는 개발 도상국 어린이들에게 빈발하는 질병 퇴치를 위한 효과적이면서도 저렴한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유엔 개발 계획(UNDP)의 결정 하에 설립되었으며, 1997년 서울에서 비영리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하였다.

유엔 관련 활동

유엔 분담금 및 인력 진출 현황



주요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현황

분류	기구명	진출직
유엔 사무국	유엔 본부	사무총장, 사무차장보, 국장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ESCAP) 아태 정보 통신 기술 센터(APOCT)	원장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ESCAP) 교통국	국장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ESCAP) 환경 개발국	국장
유엔 인도 지원 조정실(OCHA)	사무차장보, 국장	
유엔 지속 기구	유엔 국제법 위원회(ILC)	위원
	유엔 환경 계획(UNEP) 아태 지역 사무소	사무소장
	국제 형사 재판소(ICC)	재판관 겸 소장
	유고 국제 재판 재판소(ICTY)	부소장
유엔 산하 기구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	사무차장, 재판관
	유엔 산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	위원
	대륙붕 한계 위원회(CLCS)	위원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 남남 협력·재원 동원국	국장
유엔 전문 기구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 베트남 국가 사무소	사무소장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아태 지역 사무소	사무소장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평화 및 지속 가능 발전 교육국	국장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항행 위원회	위원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국제 상표 진흥국	국장
	세계 보건 기구(WHO) 사태예방 지역 사무소	사무차장
	국제 농업 개발 기구(IFAD) 아시아 태평양국	국장
	국제 해사 기구(IMO) 예산부국	국장
	국제 해사 기구(IMO) 내부 감사 및 윤리실	국장
	세계 기상 기구(WMO) 아시아 남서 태평양 지역 사무국	국장
	세계 기상 기구(WMO)	집행이사
	세계 기상 기구(WMO) 농업 기상 위원회	의장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 아태 지역 사무소	사무소장	
유엔 독립 기구	국제 원자력 기구(IAEA) 방사성 수송 폐기물 안전국	국장
유엔 감시단	유엔 인도 파키스탄 정전 감시단(UNMOGIP)	단장
유엔 위원회	유엔 인권 이사회(HRC) 자문 위원회	위원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CRPD)	위원
기타 기구	유엔 중앙 긴급 대응 기구(CERF)	지문위원
	김보디아 크메르루즈 전범 재판소(ECCC)	재판관
	사법 통일 국제 연구소(UNIDROIT)	집행이사
	WTO 상소 기구(Appellate Body)	위원
기타 기구	국제 해사 기구(ISA) 법률 기술 위원회	위원
	국제 수로 기구(IAHO) 산하 해양법 자문 위원회(ABLOS)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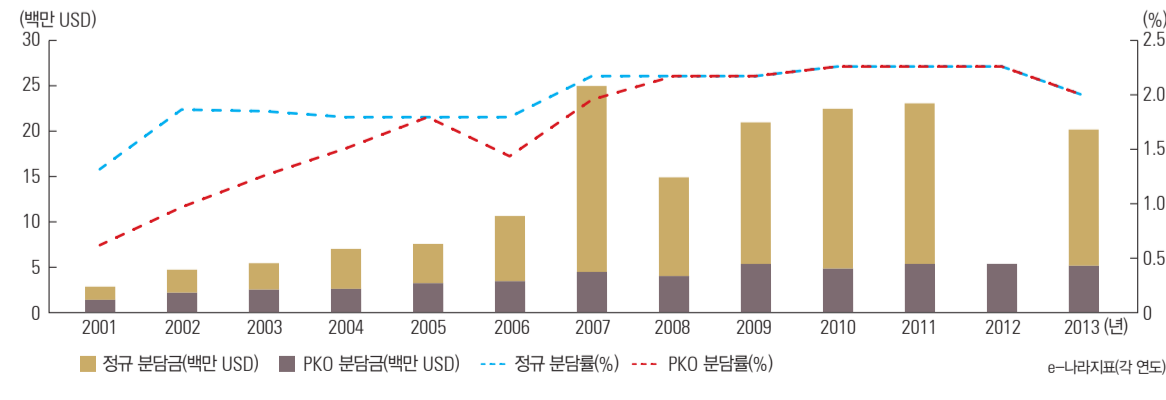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정규 예산(UN Regular Budget)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유엔 정규 예산 분담금은 2년 단위로 편성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되는데, 이는 회원국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개별 회원국의 분담률은 매 3년마다 18개국으로 구성된 분담금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총회 제5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분담률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국민 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에 비례하는데 외채 부담이 큰 경우 연간 국민 소득을 외채 상환액만큼 축소 조정하기도 한다. 또한 각국의 분담률은 22%를 넘지 않고

0.001%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상한과 하한을 두고 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분담률은 1.994%이다. 지도는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본부가 소재한 도시별로 나타낸 것이다.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뉴욕, 파리, 제네바 등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본부, 국제 원자력 기구(IAEA),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세계 보건 기구(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표는 국제기구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민 현황을 유엔 체제 기구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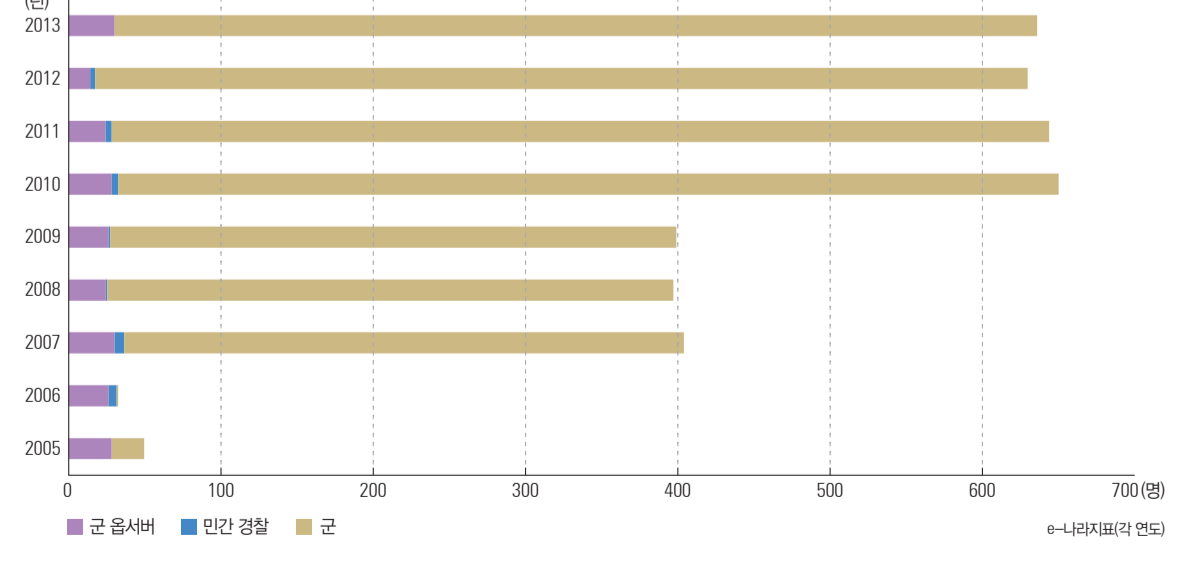
따른 인권 침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유엔 평화 유지 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s)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2014년 11월 기준 8개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임무단에 총 635명을 파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레바논(UNIFIL) 320명, 남수단(UNMISS) 296명, 인도·파키스탄(UNMOGIP) 7명, 서사하라(MINURSO) 4

명, 라이베리아(UNMIL) 2명, 수단 다푸르(UNAMID) 2명, 코트디부아르(UNOCI) 2명, 아이티(MINUSTAH) 2명을 각각 파견하여 평화 정착, 정전 감시, 재건 지원, 평화 협정 이행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PKO 예산 부담률은 1.994%로 유엔 회원국 중 12위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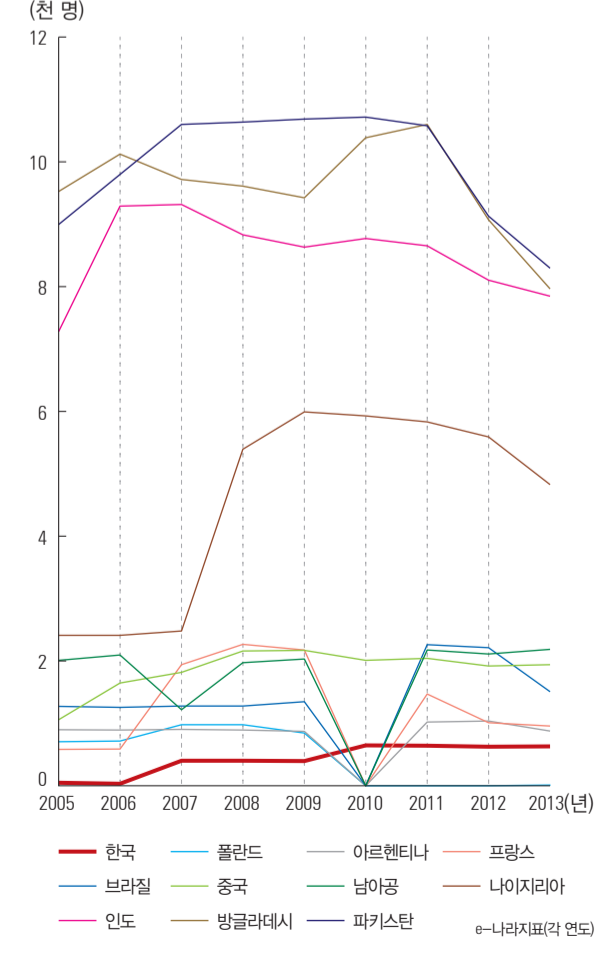
한국의 유엔 분담금 액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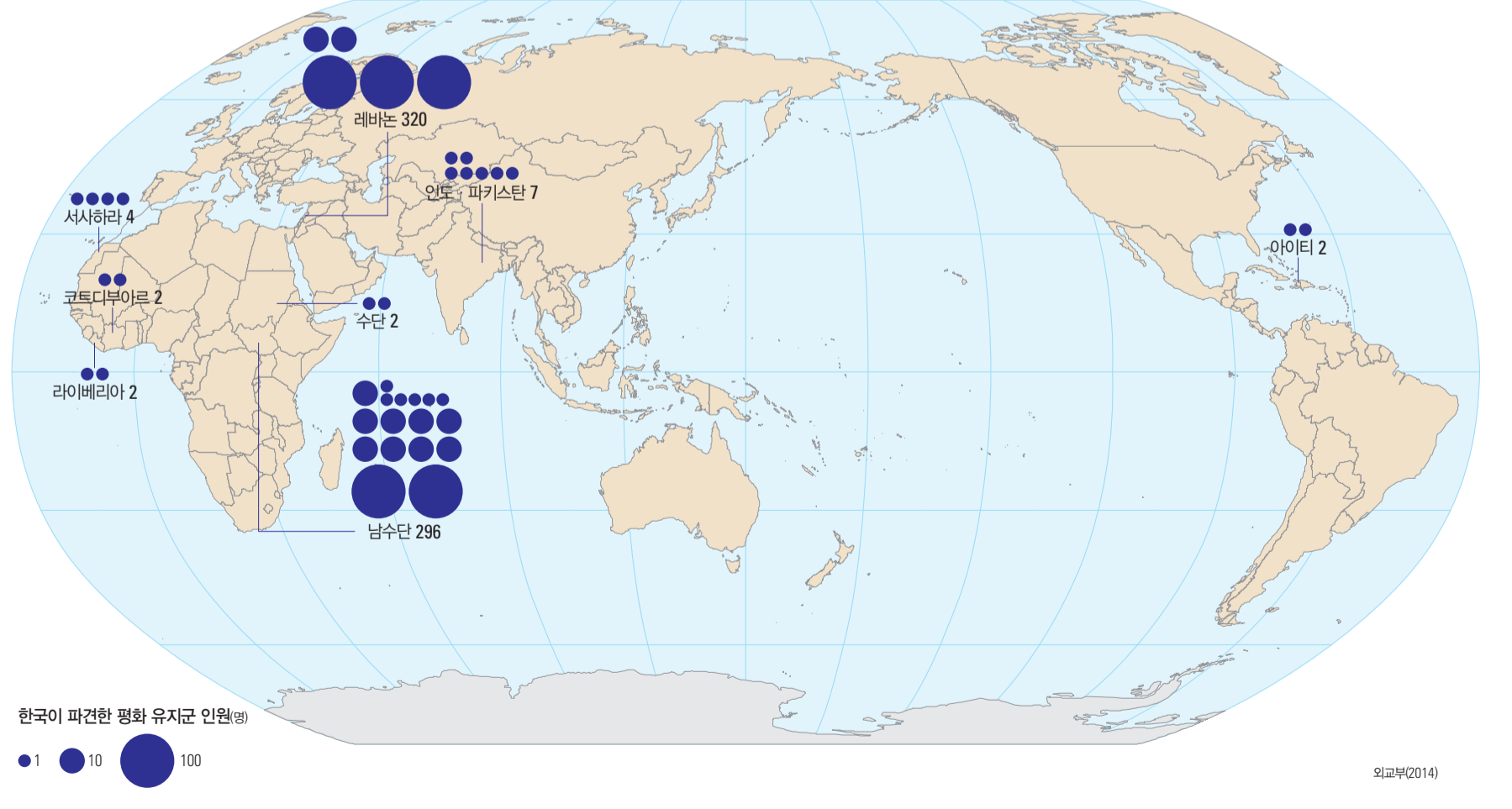
PKO 파견 인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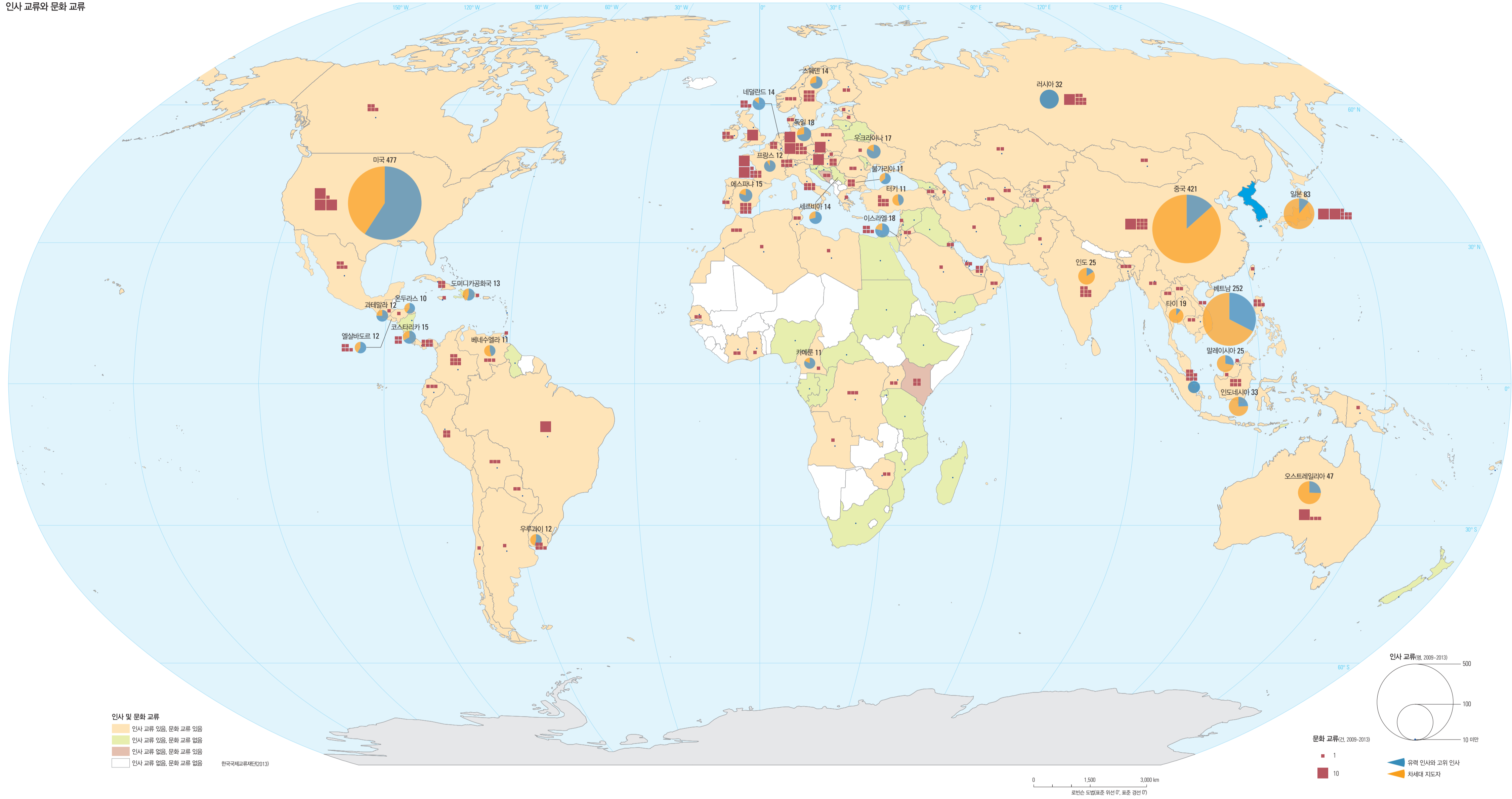
주요 국가별 PKO 파견 인력 수 추이



유엔 평화 유지군 파견 현황



국제 교류  
인사 교류와 문화 교류



정부는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고자 1991년 한국 국제 교류 재단(Korea Foundation)을 외교부 산하 공공 외교 기관으로 설립하였다.

재단은 해외 대학의 한국 관련 강좌 운영 및 학술 활동 지원을 통해 한국학의 장기적 발전과 지원(知曉) 인사 육성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한국학 기반 확대' 사업과 해외 한국 연구자와 학생에게 각종 펠로십과 장학금을 제공하는 '한국 전문가 육성' 사업 그리고 국내외 다양한 방면의 인사를 초청하여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인사 교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국가 정책 연구소의 한국 관련 연구 및 활동 지원, 국내외 포럼, 국제회의 개최, 민간 외교 단체의 교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개인,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 사업과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각종 공연 및 전시 사업과 해외 유수 박물관에 한국실 설치 지원하는 '문화 교류'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사업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예술을 폭넓게 다루는 문화 예술 전문 계간지인 'Koreana'를 9개 언어로 발간하며, 해외 대학, 도서관 및 연구 기관 등에 한국 관련 도서 및 시청각 자료를 지원하

고 있다. '지정 기부 사업'을 통해서도 국내 및 해외의 기관의 한국 관련 활동 및 사업을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포는 앞서 언급한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규모 추이를 보여 주며, 연간 총 사업비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약 400억 원에 달한다.

위 지도는 '인사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해외 유력·고위 인사 초청' 사업과 '차세대 지도자 교류' 사업 실적을 보여 준다. 전자는 해외 다양한 분야의 유력 인사 및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국내 유관 기관 방문 및 강연회 등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호 증진과 유대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후자는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세계 각국의 젊은 지도자들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도는 '문화 교류' 사업의 주요 세부 사업인 전시와 공연 실적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리나라가 가진 문화 예술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문화 국가로서의 한국 이미지를 높이고 나아가 한국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